



## 중국의 가전하향정책

중국은 가전산업의 성장과 내수부양,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가전산업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삼성경제연구소의 차이나비즈니스포럼 최근호가 전했다.

지난 2월 가전제품 하향정책이 전국 범위로 확산되었고, 5월에는 가전제품 보조정책을 출범하여 자동차 가전제품의 교체 구매를 장려하고 녹색순환경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월 1일부터 가전제품 하향 프로젝트를 전국 범위로 확대하였다.

### 가전제품 하향정책으로 전국으로 확대

농촌지역에서 가전제품 하향 제품을 구입할 경우 정부에서 13%의 재정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부는 향후 4년간 지속될 가전제품 하향 정책을 위해 300억 위안을 투입한다. 가전제품 하향 정책은 가전제품 4.8억대, 9,200억 위안 규모의 농민 소비를 창출할 전망이다.

가전제품 하향 정책은 내수 확대에 기여하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가전제품 하향 정책

은 농민에게 실질적인 우대를 부여함과 동시에 농민 생활과 생산 환경을 개선한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가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한다. 국제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가전제품 수출이 축소되면서 가전산업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으나, 가전제품 하향은 가전업체에게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한다. 가전제품 하향 정책은 농민의 소비력을 제고하여 내수 확대에 기여한다.

### 내수확대, 경제성장 촉진

그리고, 농촌시장 확대를 통한 가전 산업체의 발전을 견인하여 무역 적자를 상쇄할 것이다. 생산업체들이 농촌 소비 환경에 부응하는 가전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유통업체들이 조성한 단일 공급 구도에서 발생한 도농간 구매 편의 격차, 제품 다양성 문제, 에이에스네트워크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내수부양을 통해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의 가전제품 과잉 생산 문제를 완화하고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무역 감소 현상을 일부 상쇄한다.

가전제품 보조 정책은 가전제품 및 자동차 교체 구매를 장려한다. 지난 5월 국무원에서 가전제품, 자동차 교체 구매에 대한 보조정책을 시범지역을 거쳐 전국 범위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까지 폐기될 자동차는 270만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제품은 9천만대에 달해 연간 약 5천억 위안의 재구매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금번 교체 구매 정책은 가전제품 보급률이 높은 도시 시장을 중심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상하이, 톈진, 장쑤, 저장, 산둥, 광둥, 푸저우, 창사를 가전제품 교체 구매 정책의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다.

#### 가전제품 자동차 교체 구매 장려

교체 구매 정책은 에너지 절감 및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것이다. 8~10년 경과한 가전의 전기효율이 신가전보다 20~30% 낮기 때문에 교체 구매 정책이 실효를 거둘 경우 범국가적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녹색순환경제 정책에 따라 에너지 절감, 친환경 제품이 널리 확산되면 산업 업그레이드도 동시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조 정책은 폐기 가전제품을 체계적으로 회수하도록 유도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전망이다. 중국은 폐기가전을 회수하는 업체 및 시스템이 없어 도시 외곽지역에 무질서하게 방치되는 상황이다. 폐기가전을 고물 처리하는 개별 종사자들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분해 작업을 수행하며 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다. 보조 정책은 회수기업에게 운

송비를 보조해줌으로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교체 구매를 위한 홍보 기회로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이 정책은 전반적인 산업체인을 활성화시켜 취업난 해결에 일조할 것이다. 가전 제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업체 및 원자재 부품 물류운송 등 유관 산업에 신규 일자리가 확대된다.

#### 선택의 폭이 제한적

가전제품 하향 정책의 문제점은 가전제품 하향 제품이 다양하지 못해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다. 엄격한 가격 제한으로 시장에 진출된 제품은 대부분 저가 제품이다. 컬러TV, 냉장고, 휴대폰, 세탁기의 단가를 2천위안, 이천오백위안, 천위안, 이천위안 미만으로 각각 제한한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농촌 주민들은 이미 도시 소비 트렌드와 유사하기 때문에 가전제품 하향 정책의 혜택과는 거리가 있다.

보조금의 신청 수령 수속이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신분증, 호적부 등 여러 증명서를 지참하고 다양한 서류에 날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보조금 수려에 따른 시간이 지역에 따라 수 개월 까지 소요된다.

판매업체의 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아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정책 관련 제품 가격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높은 운송, 서비스 비용 등으로 판매업체의 수익이 제한적이다. 하향 제품은 성, 시, 현 등 단계별 판매 채널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실정이다.

## 판매업체의 수익 낮아질 듯

납세 압력이 가중되어 판매업체의 수익에 영향을 준다. 일반 소비자들은 가전제품 구매시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업 입장에서 신고 누락된 매출이 발생하나, 가전제품 하향 정책에 따른 매출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어 3%의 국세와 2.4%의 지방세를 철저히 납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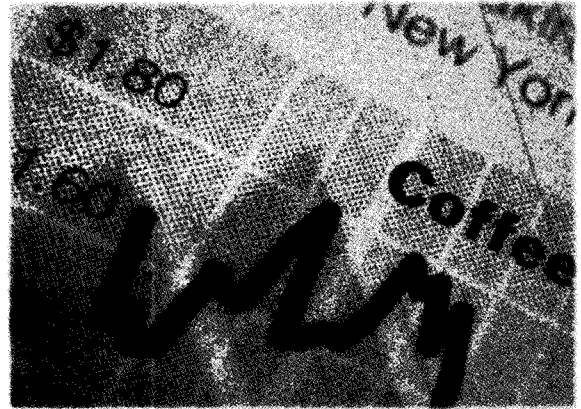
기업입장에서는 일반 소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비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전하향을 위한 제품 개발과 서비스 지원이 미흡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업체간 과열 경쟁으로 시장 질서가 문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가전하향 미션정 업체가 낮은 가격으로 농촌시장에 진출할 경우 가격에 민감한 농민들은 가전하향 제품을 외면할 수 있다.

## 보조금 수령 절차 간소화

재정과 인력 부족으로 관리 감독에도 한계가 있다. 일부 판매업체들이 가전제품 하향 정책 관련 제품의 로고를 지우고 일반 제품으로 둔갑시켜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결론 및 제언으로 가전제품 하향 정책, 보조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신청, 수령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신청 수령 속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상당수의 농민들은 참여를 꺼리는 실정이다. 가전제품 보조 정책은 주로 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산망을 이용한



원스톱서비스 시스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가전제품 보조 정책을 통해 중국 가전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실현할 수 있다. 보조 기간 이후 보조금이 폐지되더라도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들이 모두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은 산업 업그레이드를 신속히 추진, 완성할 필요가 있다.

## 녹색순환경제 발전에 이바지

가전제품 보조 정책과 함께 가전제품 회수에 대한 원칙을 규범화해야 할 것이다. 2003년부터 중국은 연간 350만대의 가전제품을 폐기하고 있으나, 폐기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폐기물을 방치하는 실정이다. 가전제품 보조 정책의 회수 운송 보조금은 대형 제조업체가 회수산업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전자제품 쓰레기 회수처리 규범을 정비하여 가전산업 성장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녹색순환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이다.